

“‘미투’ 온정주의 판결로 무력해져”

부안여고 졸업생들 성명... “해당 체육교사에게 징역 5년 구형했지만 사법부가 집행유예 선고”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이 법원의 온정주의로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교육계를 들끓게 했던 전북 부안여고의 졸업생들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해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 없이는 미투 결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최근 미투 사례들도 폭로만 나오고 (처벌 없이)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등 혐의로 체육교사 박

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졸업생들은 “과거부터 이어진 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 폭로는 사법부 판결 앞에서 무력해졌다”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판결은 극소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버려가며 폭로하고 있는데 정당

하지 못한 판결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 뒤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기 때문이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삼민 기자



“안전 전복을 위해”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진(KBS전주방송총국장)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안전관련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전문화를 위한 안전전복을 위해’ 2018년도 전라북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확정하고, ‘안전 전라북도’를 외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전주시보건소, 양막 조기 파열·태반 조기 박리 포함

전주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전주시보건소는 그동안 조기 진통과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 등 3개 질환에 한해 지원해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양막의 조기 파열과 태반 조기 박리를 포함한 5개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3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21만 278원, 지역가입자 23만 3,598원 이하)가구 중 조기 진통(임신 주수 20주 이상 ~ 34주 미만), 분만 관련 출혈(분만 관련 입원일 ~ 분만일 이후 6주),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및 태반 조기 박리(임신 주수 20주 이상 ~ 분만 관련 퇴원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산모이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상급 병실료 차액과 환자 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의료급여수급자는 100%)까지이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나 국제결혼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장병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2, 62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직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전주시는 23일 현대해상빌딩 5층 회의실에서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황인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사가 초청돼 골절과 화상, 저체온, 기도 폐쇄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 처치 방법과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위주 교육으로 진행했다.

황인기 강사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 골든타임 4분’ 동안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뇌손상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무엇보다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여성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덕진구, 26일~3월 30일까지

덕진구는 여성의 경제 활동 능력을 키워 자아 실현 및 취업·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2018년도 상반기 여성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3월 15일부터 3개월간 추진하는 한국사립업복지대사(12명) △4월 7일부터 2개월간 추진하는 정리수납전문가 1급 과정(11명) △4월 10일부터 2개월간 추진하는 과학 탐구·진로코칭지도사(8명)이다.

교육 과정 80% 이상 이수 시 교육비(수강료, 재료비 포함)의 80%까지 지원한다.

구에서는 금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1월 주민센터와 민원실

내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결과 선호도 순으로 6개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덕진구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경력단절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 우선 선발)하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평화동 BYC빌딩)와 창의예술연구회(서신동 와이마트 2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은 “결혼·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덕진구 상반기 여성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전교육

전주시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보육 교직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4일 전주비전대 대강당에서 전주지역 보육교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평가 인증 통합 지표 집합 교육을 했다.

교육은 평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 과정을 효과적이며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나림 센터장이 직접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주제로 △운영 체계 외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과 안전 △교직원 영역 등 지표에 대해 강의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원

장과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질의 어린이집을 늘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보육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 통합 지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나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교육을 실시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보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njis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약사 등 4명 입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고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약사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정모(76)씨와 종업원 백모(50·여)씨, 이모(3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19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전주시 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백씨와 이씨를 통해 불법적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약국을 이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정씨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백씨와 이씨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하도록 했다.

자신은 경기 수원에 있는 자신의 약국을 운영했다.

백씨 등은 약사 기증을 입고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정씨는 면허를 빌려 준 대가로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